

3년 비공개



의안번호	제 13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 8. (제 1 차)

의  
결  
사  
항

신화실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손 병 두
제출 연월일	2020. 1. 8.

## 1. 의결주문

신화실업(주)의 제54기(2009.1.1.~2009.12.31.)부터 제63기(2018.1.1. ~2018.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신화실업(주)의 제54기(2009.1.1.~2009.12.31.)부터 제63기(2018.1.1. ~2018.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신화실업(주)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09년 : 5,046백만원, ’10년 : 10,864백만원, ’11년 : 10,439백만원, ’12년 : 10,140백만원, ’13년 : 9,939백만원, ’14년 : 9,850백만원, ’15년 : 8,176백만원, ’16년 : 7,467백만원, ’17년 : 2,096백만원, ’18년 : 1,849백만원]</li><li>○ 외부감사 방해</li></ul>
조치 내용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징금 122.6백만원</li><li>○ 감사인지정 3년</li><li>○ 담당임원(OOO) 해임권고*4</li><li>○ 감사(OOO) 해임권고*5</li><li>○ 검찰고발(회사, OOO, OOO)*6</li><li>○ 시정요구*7</li><li>○ 개선권고*8</li></ul>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 고의 및 과실

- ('09년~'17년)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경우', '위법행위가 임직원등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의'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1.가.1), 2) 및 3)]
- ('18년)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3.가.3)]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가중 및 감경 적용) : 해당사항 없음

\*4 담당임원 해임권고 부과 조치대상이 되는 회계연도('10년~'17년) 중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회사의 자금 및 회계를 총괄하여 회계처리 위반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000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 부과

\*5 감사(000)의 경우 중과실 II 단계('16년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 부과

○ 동기판단 : '96년부터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사항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만 의존하였으며, 회사의 결산 및 내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감독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의 직무를 중대하게 소홀히 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중과실'로 판단

○ 중요도 : 감사가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감독 소홀이 있었다고 보아 회사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

\*6 검찰고발 사항 : 회사, 재무담당임원 000, 경리부 차장 000

○ 회사의 재무담당임원 000 및 경리부 차장 000 개인계좌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사실이 있고, 000과 000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회사의 회계기록을 위·변조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외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검찰고발 대상에 포함

- 회사는 2011년부터 2018년 기말감사시 거짓으로 작성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였고, 회사의 재무담당임원(○○○)이 섭외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채권조회서를 대리회신 하도록 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제3호]

※ 수사참고사항 검찰송부

- ○○○, ○○○ 및 공모가 의심되는 ○○○(前 ○○○○ 대표이사, '92년~'05년 회사의 재무담당임원 역임)의 회사 자금 횡령 정황 등을 수사참고사항으로 검찰에 송부('19.11.5.)

\*7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아 시정요구

\*8 회사의 자금(예금 및 어음 등)관리 및 채권관리 절차 관련 내부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①자금관련 통제절차(자금·회계 담당자 분리, 자금이체 담당자·승인자 분리 등), ②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통제절차(장기미회수 채권 관리절차, 대손충당금 설정 판단 근거에 대한 문서화 및 경영진 승인)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나.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 절차 소홀 ['11년 : 10,439백만원 '12년 : 10,140백만원 '13년 : 9,939백만원 '14년 : 9,850백만원 '15년 : 8,176백만원 '16년 : 7,467백만원 '17년 : 2,096백만원 '18년 : 1,849백만원]</li> </ul>
조치 내용 *1*2*3	<div data-bbox="309 1464 986 1697"> <input type="checkbox"/> ○○회계법인(중과실 II)['13년~'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li> <li>○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li> </ul>           ※ 지정제외점수 60점         </div> <div data-bbox="309 1733 1102 2067">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sup>*4</sup>(중과실 II)            ['11년~'13년 주책임자, '16년~'17년 보조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제척기간 경과)<sup>*5</sup></li> <li>○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li> <li>○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sup>*6</sup></li> <li>○ 직무연수 12시간</li> </ul> </div>

	<p>□ 공인회계사 000<sup>*4</sup>(중과실 Ⅱ)          [‘14년~’15년 및 ‘17년~’18년 주책임자, ‘11년~’13년 보조책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제척기간 경과)<sup>*5</sup></li> <li>○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li> <li>○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sup>*6</sup></li> <li>○ 직무연수 12시간</li> </ul> <p>□ 공인회계사 000(중과실 Ⅱ)[‘16년 주책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li> <li>○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li> <li>○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sup>*6</sup></li> <li>○ 직무연수 12시간</li> </ul> <p>□ 공인회계사 000(중과실 Ⅱ→Ⅲ<sup>*7</sup>)[‘16년 보조책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li> <li>○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8시간</li> </ul>
--	---

\*1 감사인, 공인회계사 000의 경우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하며, 공인회계사 000, 공인회계사 000 및 공인회계사 000는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 보다 낮아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과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동일)

○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 및 과실

- ‘11년~’17년

· (舊양정기준)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법한 경우’ 및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2.나.1),3)]

- (新양정기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에 해당하므로 ‘중과실’로 판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 - '18년

- (舊양정기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일부의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3.나.4)]

- (新양정기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과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가중 및 감경 동일) : 해당사항 없음

○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동 건 위법행위 이전 2년 이내에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이 없음

○ 감경 : 해당사항 없음

\*4 공인회계사 000과 000의 경우 00회계법인 소속으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연도('11년 및 '12년)도 합산하여 조치수준을 결정

\*5 000과 000에 대한 조치수준은 ‘중과실 II단계’로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에 해당하나, 조치일 현재 감사보고서 회사제출일 (000 : '14.3.6.( '13년 감사보고서), 000 : '16.3.10.( '15년 감사보고서))로부터 3년(공인회계사 징계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조치는 부과하지 않음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4항]

\*6 공인회계사 000, 000, 000에 대한 조치수준은 ‘중과실 II단계’로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을 부과하여야 하나, ‘중과실 II단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모두 '18.11.1. 이전('16년 감사보고서 제출일 '17.3.9.)에 발생하였으므로 '18.11.1.이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는 부과하지 않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부칙 제12조]

\*7 보조책임자로 주책임자보다 1단계 낮게 조치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VII.2]

#### 4. 참고사항

가. 제15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19.12.12.)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별지1)

## 신화실업(주)에 대한 조치안

---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신화실업(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신화실업(주)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 0000 00

☐ 000(신화실업(주)의 現 재무담당임원)

- 생년월일 : '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0 000 000 0000 00000

☐ 000(신화실업(주)의 現 감사)

- 생년월일 : '00.0.00.
- 본점 소재지 : 0000 000 000 000 000-00 0000 0000

###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신화실업(주)에 과징금 122,600,000원을 부과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27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화실업(주)는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부터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 신화실업(주) 주주총회에 대하여 재무담당임원 000 및 감사 000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 신화실업(주)에 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① 자금관련 통제절차, ② 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통제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며,
  - 신화실업(주)는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 신화실업(주), 재무담당임원 000, 경리부 차장 000을 검찰에 고발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신화실업(주)(이하 '회사')은 제54기(2009.1.1.~2009.12.31.)부터 제63기(2018.1.1.~2018.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 회계처리 위반 지적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지적금액	5,046	10,864	10,439	10,140	9,939	9,850	8,176	7,467	2,096	1,849

- 회사는 제54기(2009.1.1.~2009.12.31.)부터 제63기(2018.1.1.~2018.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회사의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 회수가능성이 없는 동 금액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제56기('11.1.1.~'11.12.31.)부터 제63기('18.1.1.~'18.12.31.)까지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추정되는 금액 및 부실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 등을 정상거래처 채권잔액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가공의 채권잔액이 포함된 거래처에 대한 채권조회서를 회사의 담당임원이 섭외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대리회신하도록 하였고,
  - 가공의 받을어음이 포함된 받을어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받을어음 실사 시 회사 소유가 아닌 실물어음 혹은 허위의 전자어음명세를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음

## 나. 근거법규

###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제170조 및 제38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별표 제2호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제56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25조의2, 별표 제2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회사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9조 및 제41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제39조, 별표 제1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재무제표 감리결과 법에 따른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 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 (1) 현금
  -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8, 59

-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3)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4)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별지2)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제58기~제63기 감사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0 000 0000 00 000000 000

☐ 000 [제56기~제58기 주책임자, 제61기~제62기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 소 : 000 000 000 000 0000 000-000

☐ 000 [제59기~제60기 및 제62기~제63기 주책임자, 제56기~제58기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 소 : 000 000 0000 0000 000000000 000-0000

☐ 000 [제61기 주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 소 : 000 000 000 000 0 000000 0000-0000

□ ○○○ [제61기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
- 주 소 : ○○○ ○○○ ○○○○○○ ○○ ○○○○-○○○○

##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회계법인은 신화실업(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6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5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며,
- ○○회계법인은 신화실업(주)의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부터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60점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은 신화실업(주)의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부터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은 신화실업(주)의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부터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게 직무일부정지 6월의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 공인회계사 000는 신화실업(주)의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부터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은 신화실업(주)의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부터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00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신화실업(주)(이하 '회사')의 제58기(2013.1.1.~2013.12.31.)부터 제63기(2018.1.1.~2018.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

## 감사절차 소홀 지적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지적금액	10,439	10,140	9,939	9,850	8,176	7,467	2,096	1,849

\* '11년 및 '12년 지적금액은 ○○회계법인 소속으로 감사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의 위반금액에 해당

### ○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감사 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58기(2013.1.1.~2013.12.31.)부터 제63기(2018.1.1.~2018.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부실거래처 등에 대한 채권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가장하여 허위계상하고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실재성 확인 및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40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회계추정치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기로 한 경영진의 결정과 당해 회계추정치를 위하여 선택한 측정기준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붙임)

## 관 계 법 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조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 4.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략>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 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주권상장법인
    -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⑦ <생 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 1~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 략>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 ③ <생 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5. <생 략>
- ③~⑧ <생 략>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 략>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 3.~4. <생 략>
- ② <생 략>
- ③ 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

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삭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 ③ 삭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

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략>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삭제

**제56조(고발등)**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 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 ⑥ 삭제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 ⑧ <생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 ⑦ <생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 략>

## 부칙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법행위의 중요도

-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 3. 조치등의 가중·감경

###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게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 ④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28.>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④ <생 략>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 법 제1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 4. <생략>

② <생략>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단서신설 2015.7.14.>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5.7.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 (1) 현금
-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 (4)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가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가) 수취할 자가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나) 확정 수량의 자가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가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의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 ③ 자가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58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59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3)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4)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2)~(6) 생략

## □ 「회계감사기준」

###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A18. 전문가적 의구심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미 입수한 다른 감사증거와 상반되는 감사증거
- 감사증거로 사용될 문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
-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조건
-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

A20.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11.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 (b) 재무제표에 예상되는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 등의 이해를 위한 기업의 성격.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i) 기업의 경영활동
  - (ii) 기업의 소유 및 지배 구조
  - (iii)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투자 등 기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투자의 유형
  - (iv) 기업의 조직구조와 자금조달 방식

A24. 감사인이 기업의 성격을 이해할 때 고려할 요소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자본조달과 재무활동에 관한 사항
  - 연결 또는 비연결되는 주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 부외 금융약정과 리스약정 등 채무구조 및 관련 조건

A25. 기업의 과거 보고기간으로부터의 주요 변화는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야기시키거나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 500 감사증거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1.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이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505 외부조회

7. 감사인은 외부조회절차를 이용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외부조회요청에 대한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 (a)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문단A1 참조)
- (b) 적합한 조회대상자의 선택(문단A2 참조)
- (c) 조회서에 수신인이 적절히 표시되었으며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등 조회서의 설계

## 미회신

12. 감사인은 각각의 미회신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

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6. 조회서에 수신인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조회서가 발송되기 전에 주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타당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포함된다.

###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

A11. 감사기준서 500은 감사증거가 기업외부의 원천으로부터 입수된 경우에도 그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회신은 중간에서 가로채이거나 변조 또는 부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회신이 종이 형태나, 전자문서 또는 기타매체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회신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

- 회신이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됨
- 회신이 원래 의도된 조회 대상자로부터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A12. 예를 들어 팩스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은 회신자의 원천과 권한에 대한 증명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변조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뢰성에 관한 위험이 따른다. 감사인과 회신자는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회신에 대해 안전한 환경이 창출되는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감사인이 그러한 절차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면 고나련 회신의 신뢰성은 향상된다. 전자적 조회절차에서는 전자형태 정보의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호, 전자서명, 그리고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A14.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00에 따라 감사증거로 이용될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변경하거나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조회처와 접촉하여 조회에 대한 회신의 원천과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회처가 전자메일로 회신하는 경우 감사인이 조회처에 전화하여 조회처가 실제 그 회신을 보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18.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1. 감사인은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내린 판단과 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목적에서 보면 경영진의 편의 가능성징후 그 자체는 왜곡표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301